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위한 제2차 양극화 대응 릴레이 간담회 개최

- 1차 지역균형발전에 이어 '보건·의료'를 주제로 전문가 정책제언 청취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향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정과 분야별 양극화 완화 대응에 활용할 예정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6일(금) 14시 '보건·의료'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제2차 릴레이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전문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2.6(금), 14시 / 한국재정정보원 9층 회의실
- 참석자 : (기획예산처)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 포용사회전략과장 등
(전문가) 김충기 교수(이대서울병원), 강희정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이번 간담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1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보건·의료분야 양극화 원인 분석과 중점 해결해야 할 과제 도출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분야별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나, 살고 있는 지역과 개인의 여건 등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의 양극화 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충기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기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재구조화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소득·고용 위기를 겪지 않도록 현재 시범사업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 고려사항 등도 논의하였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고령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필수 의료 서비스 공급을 강화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금일 간담회 이후에도 일자리, 복지, 교육 등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포용사회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4-214-1710)
		담당자	사무관	김진 (zin0427@korea.kr)

